

용산참사

진실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참사 생존자가 살인자라는 정치적 판결

지난 5월 31일, 용산참사에서 생존한 망루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에 대해, 1심에 이어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치적 압박에 의해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이다.

이번 정치적 판결로, 정부의 사과로 장례를 치른 철거민 열사들의 명예는 또 다시 짓밟혔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한 항소심 선고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무리한 살인진압 강행과 또 다른 발화가능성의 외면, 누구를 지키기 위함인가

이미 작년 3월부터 진행되어왔던 1심 재판과 올 초부터 재개된 항소심 재판 과정은 우리 사법현실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국민 참여재판을 무산시켰고, 재판부의 명령도 불복하며 수사기록을 은폐하여 변론권을 침해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밤샘조사 및 장시간 대기조사로 인권을 침해했다. 수사기록을 공개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공판과정에서 무리한 진압작전의 증거들과 불법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 등 부당한 공무수행의 여부도 애써 외면하기만 하였다. 결국 왜곡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발화와 화재참사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억지스런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만한 정황도 아니었음에도 무리한 작전이 감행되어 참사가 빚어졌음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본 사건 자체가 갖는 정치적 중압감으로 인해서, 재판부는 정의

보다는 정치권력의 힘을 택했다. 도대체 누구를 지키기 위한 판결인가!

진실은 감춰질 수 없다. 살인진압 책임자들 반드시 정의의 법정에서 세우자!

투기개발세력과 한통속이 된 정부와 여당, 검찰, 보수언론에다 이제 사법부마저 한 통속이 되어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 한다. 그렇게 진실이 계속 감추어질 수 없다.

우리는 절망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함께 해온 이 땅의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용산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자들을 피고인석에 세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자!

항소심 판결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

진압작전 미흡했고 잘못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재판부는 '진압작전의 준비가 미흡했고, 실행에서 주도면밀하지 못했으며, 2차 진입 결정에서 신중하지 못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철거회사 직원이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는 것을 방지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고 판단했으나, 진압작전은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에 기한 합리적 재량권에 위임되어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철거민에만 유죄를 선고함.

또한 농성 시위진압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침에 불과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진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별다른 상황이 없었던 19일 전날부터 경찰특공대가 투입(1차 오전 8시20분경, 2차 오후 1시 20분경)된 사실의 부당성과 관련하여서는, '작전 시작 전 대기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진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문제 없었다고 판결하여, 경찰에만 면죄부.

던진 사람도, 본 사람도 없는데, '화염병이 발화원인'!?

특공대원들이 망루내부에서는 '화염병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법정 진술들에 대해서는, '화염병을 못 봤다고, 화염병 투척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발화원인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이, 정황적으로 화염병일 것이라며 유죄판결.

망루 4층 처마밑 모서리에서의 발화장면 영상화면 외면,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머리위로 화염병을 던졌다?

또 다른 발화원인에 관해서는, '화염병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추상적이어서, 상정하기 어렵다'며, 변호인에서 제시한 '망루 4층 처마밑 모서리에서 발화가 일어나는 영상'에 대한 답변을 외면하고, '농성자 중 누군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추상적 판결로 일관.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머리위로 인화물질을 붙고,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인가!

개발지역에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던 것도, 살인적 진압에 저항한 것도, '철거민들이 선택'한 것이기에, 본인들이 책임져라!?

또한 재판부는 '우리의 경제질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다며, 이러한 경제질서 하에서 '시장에서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 논리로, '이사를 않고 재개발구역에 남아 장사를 계속하는 쪽으로 선택'했고, '진압작전 개시시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철거민들이며, 철거민들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는 우리 사회의 법이 약자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올 내일의 또 다른 용산을 막아야 한다!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과 강남시장 오세훈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살고 싶다'는 절규는, 전국 수천여개의 개발지역에서 고통당하는 철거민 모두의 절규였고, '사람'은 없고 '자본'만 살게 하는 개발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때문에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 정권과 명품 서울을 외치는 강남시장 오세훈은 가진자만을 위한 도심 개발을 진행하면서, 명품도시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을 짝퉁 취급하며 쓸어버리고, 쓸려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지를, 용산을 통해 참혹하게 각인시켜 주려 했던 것이다.

멈춤없는 삽질개발, 극심해지는 철거폭력
현재 서울시만 35개 뉴타운지역과 각각 300여개의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이 지정되어, 소형 저가의 주택과 상가 등 도시서민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7·80년대 개발독재정권을 포함해서 지난 30여년간 진행된 서울도심의 개발면적의, 두배에 이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개발이 지금 뉴타운/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와 속도의 개발은 최근 전세가의 기록적인 상승과 같은 현상을 촉발해 도시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이 불안정한 잠재적 철거민에 놓이게 되며, 개발 구역간의 보다 빠른 개발 경쟁을 불붙여, 세입자들을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용역 깡패를 이용한 폭력의 양상이 더욱 극심해 진다.

제2, 제3의 또 다른 용산들

작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참사 재발방지라는 명목으로 재개발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제도를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개정했지만, 문제의 본질

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주춤했던 뉴타운/재개발이 제도개선을 방패삼아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11년 집중될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철거직전 인가)로 08년 대비 3배에 이르는 주택의 강제철거가 예상되어, 또 다른 제2, 제3의 용산참사 재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용산참사 장례관련 담화문에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하겠다고 발표하여, 이러한 우려를 더욱 확증해 주고 있다.

투기정책을 기조로한 개발정책의 가속화

특히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명박 정권은 각종 부동산 투기정책의 신기술들을 발휘하며, 거품을 팽창시키고 있다.

건설사의 무분별한 투기 경영에 기인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주고, 이미 무력화 시킨 종합부동산세를 그마저도 폐지하기위해,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다주택자에대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남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 수도권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 장치인 DTI(총부채상환비율)비율완화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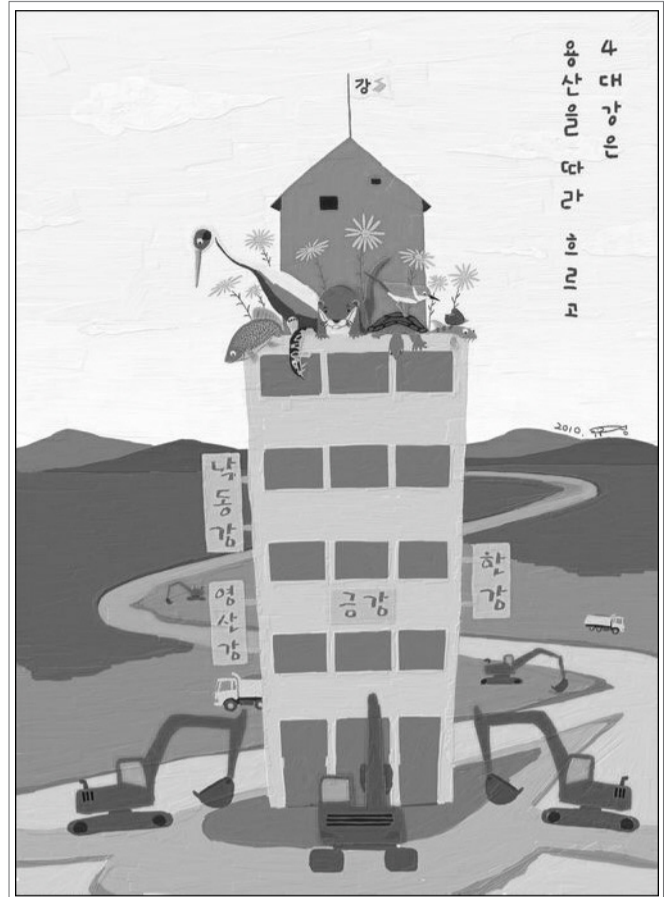
결국 부동산 투기정책을 기조로한 개발정책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올 내일의 용산을 막아내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살기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의 현실은 가난한 노동자 민중 그 누구에게나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삽질정권과 기만적인 오세



4대강은 용산을 따라 흐르고...

4대강삽질은 용산참사와 같다. 애처로운 눈망울의 저들도 용산철거민과 같은 신세가 될 것. 공사가 끝나면 복원 증식한다고 하는데, 얇은 여울에 사는 고유어종이 깊은 수로형식의 물에서 살 수 있을까? 습지가 사라져 먹이가 없는 곳에 새들이 날아올까? 맹박이의 거짓말은 한도 끝도 없다 [김규정화기]

훈 서울시장, 그리고 건설재벌과 투기세력의 탐욕을 향한 질수를 막아내기위한 강고한 힘을 모아 내야 한다. 용산을 '어제'의 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내일'로 새기고, "살인진압 진상규명! 살인개발 중단!"이라는 용산참사의 과제를 실현하는 힘을 모아가야 한다.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